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장 명 학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이 글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의 이론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일찍이 구체제를 붕괴시킨 서구 시민혁명의 토대였던 부르주아 공론장의 정치적 의미와 그 구조적인 변화과정을 면밀히 추적해낸 하버마스는, 현대의 대중사회의 특성으로서 사생활중심주의에 매몰된 시민들의 정치적인 무관심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대중조작의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해 급격히 왜곡되고 축소되어버린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개념화시키고 있는 하버마스는 대중사회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행정 체계를 지탱하는 도구적·전략적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생활세계에 내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 및 그 민주적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자율적 공론장,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토의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의한 공론장의 부활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그 핵심이 있다.

I.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지난 87년의 민주화 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 성공한 이후 한국 국민들은 그때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군사독재에 의한 대중조작과 정치적 억압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굴레와 정치적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시민들의 사회적·정치적인 관심은

그후 환경, 노동, 여성, 교육 그리고 평화 운동 등을 표방한 비정부적인 각종 시민 사회 단체들을 양산해냈고, 이들에 의한 여론형성과 정치적인 영향력의 지속적인 확대 강화 현상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한국사회의 사회적·정치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국내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짐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문자매체인 신문, 잡지 그리고 방송 등을 통해 거의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던 시대를 넘어서서, 인터넷 등을 통한 전세계적인 급속한 정보전달과 이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의견 및 의지 표출이 시공을 초월해 실시간에 그리고 쌍방향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터넷 선거운동이 성공을 거둔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변화의 기운을 감지해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혹자들은 전자매체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성급하게도 대의제 민주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즉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한다.¹⁾

직접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인 민주주의는 '인민'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와 사회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에서 유래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민주주의는 '인민의 권력' 또는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된다(Meier, 1970).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배하고 동시에 지배를 받는' 형태이자, 피지배자에 의한 직접 지배의 형태로서 궁극적으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일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은 중세에는 사라졌다가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부활하였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인구의 증가와 영

1) 전자민주주의라고 지칭되는 이러한 관점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일상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는 Alvin and Heidi Toffler,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 Atlanta: Turner Pub. Inc., 1994 참조.

2) 아울러 20세기를 풍미했던 다양한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들은 특히 서구 각국의 정치세력들에 의한 개념적인 주도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 Bleicken, *Die athenische Demokratie*, Paderborn, München and Wien. 1986 참조.

토의 광역화 등의 요인 때문에 대표자 선출에 의한 근대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의 형식, 다시 말해서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로 탈바꿈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²⁾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민의 의지 및 권력을 위임하여 통치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자기지배의 형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접민주주의의 불가피한 대안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지위를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 또는 후기자본주의 사회라고 지칭되는 오늘날, 대의제에 토대를 둔 민주정치 과정이 여전히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³⁾ 전반적으로 보아 서구사회의 경우, 대의제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들은 한편으로는 일반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심화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정치적·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신사회운동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인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대의민주제에 기반을 둔 정부의 권위와 그 정당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분화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재현하는 것은 적어도 아직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과정의 시청자에 불과했던 시민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이나 정책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하나의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즉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3) 바버(Barber)에 의하면 대의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소수 엘리트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원래적 이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취약한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enjamin Barber,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3-25쪽 참조.

활성화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공적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형성의 장인 공론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론장(Öffentlichkeit; public sphere) 개념과 이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토의민주주의론은 현대민주주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공론장 개념에 대한 정치·사회철학적인 분석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제시한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이다.⁴⁾ 그는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 및 의지형성을 통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의사소통적 권력이란 개념으로 규정하고, 정치권력과 국가 및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해내고 있다. 그는 근대적 입헌국가를 탄생시킨 근대부르주아 공론장의 역할과 그 구조변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나아가 20세기를 풍미했던 자본의 집중과 국가개입의 확대, 대중사회의 등장, 관료제와 이익집단, 사당화된 정당, 거대 기업화된 대중전달매체 등이 시민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격리시킴으로써 '공론장의 재봉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하버마스는 현대 대중사회에서의 왜곡되고 소멸되었던 공론장을 다시금 부활시켜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공적 문제, 즉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공론장의 구조변동』(1962)과 『의사소통행위이론』(1981)에 제시된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 변동과 생활세계 및 체계의 이분화가 내포하는 의미를 살펴보고(2절), 둘째 이를 바탕으로 주로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사실성과 타당성』(1992)에서 제기된 시민사회와 공론장 개념 그리고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의 연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3절), 셋째

4)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공론 영역, 공공성, 공론장, 공공권 등 번역자에 따라 그리고 문맥에 상응하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론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기로 한다.

5) 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이에 대해서는 김재현, "하버마스에서 공론영역의 양면성",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이진우 엮음, 문예출판사, 1996, 119-120 참조.

이를 바탕으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토의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4절).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아울러 현대민주주의에 제시되고 있는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5절).

II. 근대적 공론장과 체계 그리고 생활세계

1.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변화

하버마스는 자신의 초기 저작인 『공론장의 구조변동』(1962/1990)에서 근대사회의 등장 이후 점차 강화되어 온 부르주아적 공론장에 주목하면서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추적했고, 이를 통해 공론장의 정치적 의미에 주목하게 된다(Habermas 1990, 21-32). 그가 분석한 근대적 공론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정치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버마스에 의하면 전통사회를 급격히 해체한 근대사회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의 발전에 의해 형성된, 철저하게 사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이다. 개인의 자유 확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근대의 자유주의적 관점이 관철되는 시민사회 내의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행위자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이기적 행위자들로 충만한 세속화된 근대의 시민사회를 통합해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중세의 신적인 권위에 기반을 둔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닌, 보다 새로운 통합 방식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근대의 부르주아 공론장이었다. 그는 부르주아 공론장이란 여론이 형성되는 영역으로서,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 및 정치적인 문제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르주아 공론장은 따라서 전통적인 권위가 아닌, 이성적 합리적 토의에 의해 공적 사안이 합의·결정되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19세기에 유럽사회에서 등장한 근대적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중으로 결집된 사적 개인들의 영역'으로 형성되었다. 공론장과 사적 영역의 이러한 연관은 특히 신문과 잡지 등을 중심으로 결집된 근대적 시민인 사적 개인들로 구성된 독서공중의 클럽과 조직형식에서 나타

나고 있다(Habermas 1990, 86). 문자 매체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의 장이었던 근대적 공론장은 점차 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급기야는 전통적인 전제군주의 권력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했고, 부르주아 시민의 권력이 혁명을 통해 마침내 전제군주를 몰아내게 되었다. 이로써 근대의 부르주아 공론장은 부르주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체 사회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일반의지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민적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해 이를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둘째, 근대사회의 정치적 향방을 좌우했던 부르주아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은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산업사회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시장기능의 확대와 국가권력의 지속적인 확장에 의해 점차 축소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시장의 확대와 국가권력의 확장은 역으로 일반의지를 표방했던 근대적 공론장의 보편적인 특성이 붕괴됨을 의미했고, 이제 공론장은 대중소비사회의 특성에 발맞추어 사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축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즉 정치적 정당성의 발원지였던 공론장은 대중조작 및 대중 소비문화의 진원지이자 선전장으로 퇴락했고, 정치의 공개성이 아닌 밀실정치로, 그리고 시민은 비판적 합리적 시민 공중이 아닌,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시민 '대중'으로 대체되었다. 공론장의 이러한 변화추세는 가속화되었고, 급기야는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Habermas 1990, 170-173). 공론장의 쇠퇴와 함께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권력은 근대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기능에서 이탈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체계에 개입하게 된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보다 많은 기술관료제, 즉 행정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행정체계의 급속한 확대에 발맞춰 공론장은 그 정치적 중요성을 상실해 탈정치화되었다. 복지국가의 기술관료적 분배정책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복지혜택 수혜에만 몰두하고, 사생활중심주의에 빠져들게 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무관심의 확산과 공론장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근대사회의 정치적 정당성의 토대였던 공론장의 몰락은 동시에 후기 자본주의적 국가체제의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이 위기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공론장의 붕괴라는 초기 당시의 비판적인 진단을 하버마스는 후기에 와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생활세계와 체계의 이분화

하버마스는 특히 자신의 『의사소통행위이론』(1981)에서 공론장의 구조변화를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이분법적 개념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패러다임은 근대화과정에 대한 성찰에 근거한 것이다.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 하버마스가 제기하는 근대사회의 발전에 대한 보다 적절한 인식은 바로 이 생활세계와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사회발전의 수준이란 “생활세계의 합리화”(Habermas 1981b, 219)의 정도와 병행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계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개인들간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적인 합리화와 행정체계의 정비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물질적 재 생산을 담당하는 체계의 원활한 운영은 구성원들의 생활세계적인 전제조건, 즉 “사회문화적인 생활세계의 유지조건들”(Habermas 1981b, 228)을 과연 얼마만큼 충족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세계의 조직화와 구성의 규범적 발전의 수준, 즉 생활세계의 합리화의 정도는 한 사회의 진보 및 발전상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 정도는 그 사회의 ‘체계’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인 발전 정도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라는 사회적 삶의 양식의 수준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하버마스는 근대화과정의 분석을 통해 “생활세계가 경제 및 국가행정과 같은 보다 더 복합적이고 형식적으로 조직화된 행위영역과 분리”(Habermas 1981b, 452)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물질적 재생산과정의 발전은 동시에 전통적인 국가행정 체계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경제와 행정의 합리화를 통한 기능적 전문화는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세계와는 분리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근대사회의 기능적 전문화과정에 따라 행위 체계들 중의 일부는 생활세계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상호이해에 기초한 통합된 사회적 행위영역에서 ‘자립화’하여 독자적인 코드를 형성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체계의 영역이다. 경제체계의 경우 화폐화에 의해, 행정체계는 관료화된 권력을 통해 자기 독자적인 영역으

로 분화된다. 이로써 하버마스는 행정 및 경제활동 영역인 체계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삶의 재생산 양식인 생활세계를 이분한다. 경제체계는 화폐를 매개체로 하고 있고, 정치(및 행정)체계는 권력에 의해 매개되는 영역으로서, 이는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행위의 영역인 생활세계와 구별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제 및 행정체계들도 화폐 및 권력 등과 같은 매체의 법적 제도화를 경유하여 사회라는 생활세계의 구성요소에 정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활세계적 의사소통의 메시지는 자기조절적인 행위체계의 전문화된 코드 속으로 수용되며, 동시에 그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전환도 일어난다. 말하자면 생활세계와 체계의 피드백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체계의 영역과 생활세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양자는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세계는 하버마스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 관습 그리고 전통 등에 의한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의미연관" (Habermas 1988, 99)으로서, 세계 및 자기이해의 잠재력에 의거한 사회의 상징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사회문화적인 자명성의 지평이다. 즉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는 한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실천, 즉 삶의 영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그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를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적 재생산이 아닌,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재생산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적인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구성되고 또한 유지된다. 따라서 생활세계 전체는 최종적으로는 자율적인 의사소통행위들로 엮어진 하나의 연결망이기도 하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사회구성원들은 바로 이 생활세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규제하거나 비판하는 '규범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규범적인 잠재력을 그는 의사소통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에서 찾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지탱하게끔 하는 규범적 잠재력, 다시 말해서 규범적 강제성이 바로 이 의사소통적 행위에 내재하는 합리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인간의 행위를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전략적 행위에 대해 살펴보자. 하버마스에 의하면 전략적 행위는 목적 합리성에 입각한 행위이다. 즉 하나의 행위가 지향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이를 "목적 합리적인 행위"라고 부른다. 목적합리적인 행위는 따라서 성취지향적인 행위라고도 불린다. 이때 행위의 대상이 자연이나 사물일 경

우, “도구적 행위”로 지칭되고, 그 대상이 인간일 경우, “전략적 행위”라고 부른다(Habermas 1981a, 384-385) 이와는 달리 “의사소통적 행위”는 인간 상호간의 생각과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해지향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이해지향적인 행위는 상호 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화자와 청자는 이 대화를 통해 의미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이해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자와 화자는 상호주관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Habermas 1981a, 28). 이를 간략히 종합하면,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적 행위는 비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는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따라서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히 사회적 행위 유형에 속하지만, 성취지향적인 전략적 행위는 체계, 특히 경제 및 국가(행정) 체계의 활동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행위는 따라서 행위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대상을 — 비록 그것이 자연이든 인간이든 —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반면에 일상언어에 기초한 상호 이해지향적인 의사소통 행위는 시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관류하는 행위유형으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호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해지향적인 의사소통 행위는 체계가 아닌 생활세계의 영역에 부합하는 행위유형으로서 합리적 대화를 통해 인간상호간의 의견이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해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체계와 생활세계는 전혀 다른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체계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수단 합리성, 즉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이와는 달리 사회적 삶의 재생산 양식인 생활세계는 구성원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이분화를 통해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진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 재생산의 위기, 즉 자본축적의 장애는 체계의 위기를 수반하게 된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화와 이에 상응한 관료제의 확대를 견지하는 체계는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생활세계를 병합·종속시키는 생활세계의 “내적인 식민화”(Habermas 1981b, 452)라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⁶⁾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강제적인 종속화 현상은 동시에

6)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체계라는 이분법적 구별은 사회적 삶의 재생산 메커니즘의 차

체계유지의 논리인 도구적 합리성의 확대팽창으로 인한 생활세계 내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료제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심화시키고 따라서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장애는 실업 등에 의한 노동의 소외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치참여로부터의 배제와 노동의 소외에 대해 서구의 사회복지국가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주의, 특히 복지국가 정책으로 대처한다. 복지국가의 행정체계는 한편으로 시민의 기본권 확대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복지혜택 등 공공서비스를 증대시킴으로써 개인들을 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고객으로, 그리고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지위로 자리매김시켜 이른바 대중사회를 고착화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장애와 복지국가의 체계위기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긴장관계와 갈등을 일단 잠재워 사회통합에 대한 위협을 저지시키고 체계의 유지를 위한 정당화를 확보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한 관료조직의 확대·심화는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의 영역인 생활세계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생활세계의 위축을 가속화시킨다. 나아가 전문화된 지식체계의 제도화에 따른 문화영역에서의 전문화는 생활세계에서의 문화적 빈곤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이는 생활세계의 비판적·해방적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체계에의 종속화를 통한 생활세계의 위축은 동시에 사회적 삶의 규범적 잠재력이 표출되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영역인 공론장의 위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세계와 공론장의 무기력화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체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즉 성숙된 민주화라는 과제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하버마스는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을 위협하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새로운 갈등 양상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이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생활세계는 행위자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거한 사회적 삶의 재생산 영역이고, 이러한 의사소통에 의거하지 않는, 따라서 행위자들의 의도를 넘어서는 영역은 체계의 영역이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정호근, "근대성의 변증법과 비판적 이성의 기능 및 가능성", 『철학』 제43호, 1995, 397-398 참조.

하버마스에 의하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갈등 및 대립 양상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해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선 근대국가의 형성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정치 및 사회운동이 대체적으로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모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해결책을 피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의 혁명적 변화에 그 초점을 두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의하면 분배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계급간의 갈등은 서구 사회의 경우, 전후인 5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과 급속한 부의 확대에 힘입어 복지정책으로 조절 가능하였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분배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전되어 제도화됨으로써 그 갈등이 순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그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1970년대를 전후하여 서구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운동들, 즉 환경, 여성, 반핵 및 평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형성되는 시민운동인 신사회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둘러싼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치중되었던 구사회운동과는 달리, 신사회운동은 생활 주변의 새롭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이다. 이 운동의 관심은 이제 정치권력의 쟁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정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운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저항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운동은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체계의 억압과 이에 저항하는 생활세계의 비판적·해방적 잠재력 사이의 대립 및 갈등의 현장에서 등장한다고 하버마스는 말한다.⁷⁾ “요컨대 이러한 새로운 갈등들은 분배문제가 아니라, 생활양식의 문법의 문제를 둘러싸고 불붙은 것이다”(Habermas 1981b, 576). 이러한 하버마스의 관점은 고도 산업사회에서 신사회운동이 등장하는 것은 성장위주의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체계의 논리는 생활세계를 위협하지만, 이러한 위협에도

7) 하나의 좋은 예로서는 핵발전 사업을 견지하려는 경제(자본) 및 국가(행정)와 이에 대항해서 핵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독일의 환경단체(신사회운동)의 저항을 들 수 있다.

불구하고 “생활세계가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거나 개혁된 생활세계가 자신을 관철시키는” (Habermas 1981b, 581), 즉 비판적이고 규범적인 자기실현의 잠재력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여러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통해 하버마스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영역인 생활세계가 자신의 고유한 논리를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는 데서 비판적이고 해방적이며 따라서 민주적인 잠재력을 발견해낸다. 나아가 하버마스는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투쟁이 아닌, 다시 말해서 경제 외적인 문제인 “삶의 질, 기회의 균등, 개인의 자기실현, 참여 그리고 인권의 문제들” (Habermas 1981b, 577)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대립관계는 특히 체계의 논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와 이에 저항하는 생활세계의 논리, 즉 비판적 잠재력에 근거한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관계로 압축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관계는 양자가 서로 다른 논리, 즉 체계의 논리와 생활세계적 논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하버마스의 새로운 과제는 따라서 체계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생활세계에 내재하는 해방적 잠재력을 드러내고 표출해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생활세계의 해방적 잠재력이 현대사회의 시민들의 민주적인 생활양식의 규범 형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특히 시민사회와 민주적 공론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III. 시민사회와 민주적 공론장

1. 생활세계에 뿌리를 둔 민주적 시민사회

하버마스는 특히 후기 저작인 『사실성과 타당성』(1992)에서 자신의 초기 저작에서 내렸던 공론장의 왜곡과 붕괴라는 비판적 진단과는 달리, 고도로 발전된 후기 산업사회에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위축이 역설적으로 다시금 공론장의 저항 또는 반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⁸⁾ 이러한 하버마스의 새로운 진단은 후기 산업사회인 현대사회를 보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경제적 특성이 지배적이었던 근대의 시민사회와

는 달리 사회적 기능의 지속적인 분화와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탈중심화된(dezentrierte) 사회”이다(Habermas 1992, 362). 여기서 탈중심화된 사회란, 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각 부분 체계들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부분 체계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 고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하버마스의 견해에 의하면 이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하부체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중심’이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 모두 현대의 탈중심화되고 익명화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한다(Habermas 1992, 15). 하버마스는 앞서 말했듯이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힘 또는 권력이 형성되는 공론장의 중요성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적인 토대 또는 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시민사회 개념을 형성해낸다.

말하자면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에 대한 일대 전환을 시도한다. 하버마스가 이해하는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는 변화된 현대라는 상황 속에서 재발견된 다소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게 시민사회는 헤겔이 말한 ‘욕구의 체계’와 같이 자유주의적 전통에 의거한 부르주아적 시민사회 — 즉 사회적으로 분업화된 노동과 상품거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체계로 개념화되었던 사회 — 개념과는 구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는 맑스주의에서 주장하는, 노동 및 자본시장 그리고 상품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경제적 활동영역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는다. 나아가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상부구조의 사회문화적인 영역이라는 그람시의 입장과는 구별된다.⁹⁾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말하는 시민사회란 어떠한 특성을

8) 공론장의 이데올로기적 왜곡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이 지니는 정당성의 계기와 그 해방적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Craig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The MIT Press, 1992. Introduction 참조.

9) 하버마스가 비판사회이론의 역사에 기여한 공헌은 생산과 분배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의거하지 않으면서도 해방적 관심에 기초한 비판적 시대진단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은주, “시민사회의 비판적 잠

지니고 있는가?

하버마스에 의하면 우선 시민사회의 제도적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생활세계의 시민들의 자유의지에 토대를 두고 있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들과 결사체들”(Habermas 1992, 443)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경제 및 기타의 사회적 기능 체계와는 구별된다.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다양한 결사체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생활세계에서 빚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감지해 공론화함으로써 정치적 공론장으로 이전시킨다.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시민사회는 다소 자발적으로 형성된 결사체들, 조직들 그리고 운동단체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결사체들과 조직들과 단체들은 사회적인 문제상황이 사적인 생활 영역들에 전파되면서 일어나는 반향을 청취하여 응축·증폭시킨 다음 정치적 공론장으로 전달한다.”(Habermas 1992, 444)

요컨대 시민사회는 전사회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 시민들의 사적인 생활사(史)에 미친 영향과 그 반향을 해석하고 또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론화시켜 나간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인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에서 출현한 시민공중과 이들에 의한 결사체나 단체 등은 자신들의 사회적 관심과 경험에 대한 공적 해석을 추구한다. 동시에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제도화된 의견 및 의지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자율적인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전체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의 향방을 둘러싼 문제해결적 담론들을 엮어 내는 결사체나 단체들이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주장한다.¹⁰⁾ 이때 각종 결사체나 단체 등에 의한 공론화된 담론들은 원칙적으로 평등하고 개방적인 특성, 즉 의사소통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며 동시에 그 의사소통에 연속성과 지속성을 부여한다. 물론 이 결사체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은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 및 그 하위문화 등에서의 보다 성숙된 다원주의와 이를 보장하는 법치국가적

재력” 『철학』 제64호, 2000, 251쪽 참조.

- 10) 코엔과 아라토도 국가 영역인 정치·행정 체계와 시장의 영역인 경제 체계로부터 시민사회를 분리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특징적 요소로서 다원성, 공공성, 사생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국가와 경제로부터 경계지우는 데 필요한 법률성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J. Cohen and A.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IT Press, 1992. 346쪽 참조.

헌법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우선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은 특히 사적인 자율성, 즉 개별 시민의 사적인 자유권과 아울러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결사체들의 공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보호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 프라이버시의 확보는 사적 생활영역의 불가침성을 천명한다. 개별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자유로운 결사체들의 형성을 보장하고 또한 이들의 운동공간을 규정한다. 나아가 출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는 경쟁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대변함으로써 개방성을 보장하고 있다(Habermas 1992, 445-446).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 의사소통의 매체인 대중전달매체의 영향력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체제는 정당활동과 시민의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결사체, 단체, 운동들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있게 된다. 물론 하버마스도 체계에 비해 생활세계 속의 행위자들에 의한 결사체들이 정당이나 이익단체 등과 같이 조직화된 단체에 비해 그 조직성과 응집력이 떨어지고 행위능력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생활세계의 시민들이 전사회적인 위기상황이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처해서는 놀랄만큼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생활세계에 기초한 시민사회라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주변부가 정치의 중심부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새로운 문제상황을 지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민감성을 훨씬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에 토대를 둔 시민사회는 기존 정치체계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체계의 관례화된 의사소통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92, 460)

현대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전략적 행위와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정치 및 경제 체계의 생활세계에 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생활세계로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결사를 통해 형성되는 신사회운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체계의 압박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공론장의 자생적인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점에 근거해서 하버마스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내지 병합을 묵과하지 않는 생활세계에 뿌리내린 시민사회와 이에 바탕을 둔 정치적 공론장의 민주적인 잠재력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생활세계에 뿌리를 둔 이러한 다양한 결사체들에 의한 시민사회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시금 합리적인 정치문화라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조직체들 중 상당수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치중되거나 또는 권력화될 수도 있어서 현대사회를 더욱 분열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는 “오로지 자유로운 정치문화의 맥락 속에서만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화 유형 및 왜곡되지 않은 사적 영역의 토대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시민사회는 오로지 이미 합리화된 생활세계에서만 전개될 수 있다.”(Habermas 1992, 444) 요컨대 민주적 시민사회는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정치문화, 즉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성숙된 문화적인 측면을 공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한에서만 민주적 시민사회는 “자율적인 공론장의 토대”(Habermas 1992, 363)를 이루게 된다. 민주적 공론장은 따라서 시민사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내재한 해방적·민주적인 잠재력을 드러내주고 가시화시킴으로써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로서의 자율적 공론장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은 생활세계로부터 자생하는 시민들간에, 그리고 시민과 결사체들 및 결사체들 사이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영역이다. 앞서 말했듯이 생활세계와 체계간의 관계는 화폐와 권력이라는 운행매체를 통해 상호적으로 매개되고 있고 따라서 체계는 생활세계와 긴밀한 연관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경제영역이 아닌 국가의 행정체계의 경우, 권력의 제도화를 통한 생활세계와의 연계는 단지 한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행사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정당화가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행사의 정치적 정당화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지지와 동의는 하버마스에 의하면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적 공론장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공론장이 단순히 권력행사의 지지라는 사후적인 정치적 정당화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공론장은 생활세계의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공적 의견 및 의지형성의 공간으로서 정치적 정당성이 형성되는 근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자율적 공론장은 생활세계로부터 형성되는 민주적이고 규범적인 잠재력이 표출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에 의하면 자율적 공론장은 “정치 체계에 의해 정당성 창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산출되고 유지되지 않는” 민주적인 공론의 영역이다. 이러한 민주적 공론장의 “힘은 포괄적으로 합리화된 생활세계라는 자원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Habermas 1985, 422-423) 이 때문에 공동체의 정치적인 정당성도 생활세계에 기초한 공론장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권력을 매개로 하는 행정체계나 돈을 매개로 하는 경제체계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합리적 의사소통의 영역인 공론장에서 찾고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의사소통행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론장에서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매체는 권력이나 화폐가 아닌, 일상언어이다.

일상언어를 매개로 한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상호 이해지향적인 의사소통행위의 주체인 시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사회의 통합력으로 작용한다.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의사소통적 행위는 체계에서 강조되는 성취지향적인 전략적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해 인간상호간의 의견이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즉 상호 이해지향적 행위자는 공통의 상황 이해에 의존하며,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한다. 따라서 이해지향적인 의사소통 행위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히 인격적으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의 상황 및 관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Habermas 1981b, 28과 384). 전략적 행위자들이 상대방을 객관적 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대상, 즉 사물로 관찰함으로써 도구적인 합리성에 따라 행위하는 것과는 달리, 의사소통행위자들은 그들이 협동하여 산출해낸 공동의 ‘해석’을 통해 스스로 구성한 상황, 즉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언어상황의 사회적 공간 속에서 서로 만난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특히 언어적으로 구성된 공적 공간인 공론장 속에서 이루어진다(Habermas 1992, 436). 이 공간은 이미 함께 있거나 또는 미래에 존재하게 될 잠재적인 대화 상대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나아가 인간간의 대등한 상호관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자율적 공론장은 따라서 시민들이 합리적 대화를 바탕으로 공적 의견을 형성해냄으로써, 합리화된 생활

세계에 내재한 규범적 잠재력을 드러내게 한다.

합리화된 생활세계라는 자원에서 그 힘을 이끌어내는 공론장에서는 생활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이슈들이 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사적인 경제영역의 문제를 굳이 공론장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는 공론의 주제 역시 사적인 것과 별개의 공론이 아니라 그것과 긴밀히 연관된 공론이라고 강조한다.¹¹⁾ 공론장에서 언어화되는 문제들은 생활세계의 시민들의 개인적인 생활경험을 투영하며 그 사회적 반영물들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공론장 자체는 사적 개인들이 공중으로 결합된 근대적 공론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사의 차원에서 공명을 일으킨 사회적 문제상황에 대한 사적 가공처리에서 자극을 받기”(Habermas 1992, 364)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공론장에는 —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행위 영역이나, 또는 이러한 기능체계들을 조절하는 국가기구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 생활사적 경험이 누적되어 반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능체계들이나 국가에 의한 서비스의 실패는 곧장 개인적인 생활경험 속에 투영되며, 사적 개인들의 생활사들은 생활세계의 지평 속에서 축적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부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공론장에서 언어화되고 비판되는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산출된 고통의 반영물이기도 하다(Habermas 1992, 441). 이러한 고통의 반영물들이 종교, 예술, 문학의 언어 속에서 함축성 있게 표현되는 한,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또는 ‘문학적’ 공론장은 물론 정치적 공론장과 연관을 맺게 된다. 정치적 공론장은 일반적으로는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여 생활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사소통구조이다.

정치적 공론장은 한편으로는 정치체계에서 받아들이고 가공·처리해야 할 문제들의 “공명판”(Resonanzboden)이며, 동시에 비록 전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민감한 센서를 지닌 경고체계의 역할을 담당한다(Habermas 1992, 435).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은 이러한 신호기능을 넘어서서 생활세계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문제들을 인지해서, 설득력있고 영향력있게 주제화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 이는 특히 의견 및 의지형성으로 나타난다 — 생활

11) 이 점에서 하버마스는 아렌트와 구별되고 있다. 하버마스는 경제문제를 공론장에서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아렌트는 공론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밀히 구분하고 정치의 영역인 공론장에서 사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다. 이에 대해서는 Hannah Arendt, *Vita Activa. München*, 1958. 27-75쪽 참조.

세계와 체계를 매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공론장은 제도나 조직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권한 및 역할의 분화나 그 구성원의 자격조건이 요구되는 규범적 구조물이나 체계는 더욱 아니다. 공론장은 자신을 엄격히 경계지을 수 없는 개방성과 삼투가능성 그리고 변화가능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론장의 특성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공론장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공론장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다면 내용들과 태도표명들, 즉 의견들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로 기술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흐름들이 걸러지고 종합되어 주제별로 엮어진 공적 의견들로 집약된다.” (Habermas 1992, 436)

즉 공론장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의 흐름이 매개되고 여과되어 주제별로 집약된 공론을 형성해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론장은 현대사회의 정치 및 경제체제와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중간구조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공론장은 다양한 수준으로 분화되어 있다. 우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중첩되는 다수의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공동체적, 하위문화적 영역들로 분화되어 있다. 둘째, 다루는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공론장은 기능적인 관점들, 주제의 비중 등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학적 공론장, 교회의 공론장, 예술가의 공론장 등이 있다. 셋째, 또한 공론장은 술집이나 다방 등의 일상적인 공론장을 비롯해서 학부모 모임, 록 콘서트, 파티모임, 정당의 집회 같은 기획된 공론장을 거쳐 넷째, 전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 독자, 청중, 시청자들로 구성되고 대중전달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추상적인 공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공론장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언어적으로 구성된 자율적 공론장들은 서로에게 개방적이며 변화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Habermas 1992, 438). 하버마스에 의해 제시된 현대사회에서의 공론장 일반의 특성을 중요한 점만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론장은 여타의 행위체계나 지식체계처럼 전문화되지는 않는다. 즉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구조는 생활세계에서처럼 일상언어적으로 매개된 일반적인 이해가능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는 것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복잡하고도 익명화된 현대사회에서 또다시 일정 정도의 '탈분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탈분화는 일반 시민들의 동조 내지는 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공론장에서 주제화되는 의견들을 공적 의견으로 묶어내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참여자들 다수로부터의 광범위한 동의 및 지지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시금 해명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해명은 전문화된 영역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코드와 전문적인 언어 없이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둘째,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공적인 의견 및 의지 형성의 성공여부는 의사소통행위에 바탕을 둔 담론¹²⁾의 수준에 달려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 충실한 제안들, 정보들, 근거들에 대한 합리적 가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의견형성의 담론적 수준과 그 결과의 '질'이 달라진다. 이러한 질적인 문제는 공적인 의사소통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척도는 일반성의 창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준높은 질적 조건을 갖춘 공적 의견의 산출을 가능케 하는 형식적 기준, 즉 시민들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의사소통 실천의 규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공적 의견의 질은 경험적 차원에서는 그것을 산출하는 과정의 절차적 속성에 비추어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공적 의견이 정치체계에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의 정당성을 측정케 하는 토대를 제공한다(Habermas 1992, 438-439).¹³⁾

셋째, 물론 이러한 것은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이다. 반면에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국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력에 의해 조정되고 질식된 공론장이나, 나아가 이익집단이나 대중매체 등에 의해 점령당한 따라서 스스로 권력화된 공론장이 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왜곡된 공론장과는

12) 담론이란 의사소통에 있어서 단순히 어떠한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행위자들이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선(先)이해에 대한 의미연관의 타당성 요구 자체가 주제가 되어 논의되는 경우를 말한다. 담론에서는 특히 사실에 대한 이해,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특정 행위의 정당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13) 이러한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공론화를 통한 공적 의견의 대표성이 통계학적 의미의 여론조사에 따른 대표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바탕을 둔 통계학적인 의미의 대표성은 개별적인 질문을 받고서 사적으로 표명한 개인 의견들을 집약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생활세계와 단절된 공론장은 공론장의 의사소통구조가 사적 생활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론장들 사이의 단절은 개방성과 상호침투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공론장의 본래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자율적 공론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Habermas 1992, 460).

넷째, 공론장에서도 영향력을 둘러싼 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공론장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달려 있다. 즉 공론장에는 이미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공직자나 기성 정당 그리고 그린피스 같은 집단들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권위나 문인 및 예술가의 지명도, 과학자나 스포츠 스타의 유명도 등이 영향력을 둘러싼 투쟁에 가담한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최종적으로는 평등한 지위에서 함께 모여있는 아주 평범한 일반공중들이 보여주는 공명, 즉 동의 내지 지지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로 구성된 공중은 최소한 자기에게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이해가능하고 일반적인 관심을 끄는 제안을 통해서 설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론장에서의 영향력은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해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론장의 실질적인 주인은 시민들로 구성된 공중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Habermas 1992, 440).

마지막으로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형성된 영향력은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의 의무와는 분리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즉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은 그 자체로서는 정치적인 결정과 함께 직접적인 권력행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버마스는 공적인 의견이 권력행사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하려면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절차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은 아직은 정치체계에 대해 단지 영향력을 미칠 뿐이다. 왜냐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공된 공적 의견은 스스로는 '지배' 할 수 없고 단지 권력 행사의 방향을 지시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형성된 영향력은 정치권력화, 즉 의사소통적 권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

공론장에서 주제화된 공적 의견, 즉 공론은 구체적으로는 개별 유권자들의 선거 행태나 의회 및 행정체계 등과 같은 제도화된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집약된 공론은 비로소 의사소통적 권력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권력은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의 영향력이 유권자, 의회 등 제도적 절차의 매개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정치적 공론장의 의사소통 회로는 사회적 관성의 선택압력에 유달리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산출된 영향력은 민주적 절차의 수문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정치체제 일반의 댐을 통과할 때 비로소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Habermas 1992, 398)

이처럼 하버마스는 제도화된 절차에 의거한 의사소통적 영향력의 정치권력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논점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동원양식이 비록 현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목표는 반민주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경고한다.¹⁴⁾ 이러한 맥락에서 법치국가의 제도적 절차를 중시하는 하버마스는 특히 입법기관인 의회와 공론장의 효과적 연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요컨대 공론의 영향력이 정치적 권력을 산출하려면 의견 및 의지 형성의 민주적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 영향을 미쳐야만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의 공식적 의결이라는 권위있는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Habermas 1992, 450). 이러한 의결을 통해 형성된 것은 바로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다. 하버마스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오늘날의 정치체계를 행정권력의 영역과 의사소통적 권력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법을 통해 양자를 매개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근대적 법치국가가 그 기초로 하고 있는 ‘현존하는 국민의 육화된’ 형식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제 모든 권력이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산

14) 물론 시민사회에서 민중의 목소리는 공론화됨으로써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따라서 공적 이성을 지니지 못한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거나, 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즉흥적인 정치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Margaret Canovan, *Populism*.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Javanovich. 1981. 제5장 참조.

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적 지배 자체는 반드시 '정당하게 제정된 법'에 의해 공적 권력으로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abermas 1992, 198). 법은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나오며, 동시에 의사소통적 권력은 법적 형식을 통해서만 행정권력으로 변형된다.¹⁵⁾ 이때 법은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정권력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체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행정권력에 대한 의사소통적 권력의 우선성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법의 형식을 지닌 행정권력은 의사소통적 권력이 제시한 규범적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공론장의 의사소통구조는 사회적 문제의 압력에 반응하고 영향력있는 의견을 자극하는 센서들의 네트워크이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권력이 담당한다(Habermas 1992, 364). 이러한 기능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행정권력은 의사소통적 권력과 긴밀한 연관 속에 있다. 행정권력은 스스로 규범을 제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소통적 권력에 의한 범규범의 한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부의 법률과 사법부의 법적 적용의 통제를 받게 된다. 나아가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행정과정에 위원회와 공청회 제도 등과 같은 시민들의 참여형식이 도입됨으로서, 시민들의 공론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불가분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론장이 지닌 정치적 의미는 이제 정치체계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다. 하버마스는 특히 구속력 있는 결정, 즉 법의 제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시민사회로부터 의회와 법정 등 제도적 절차를 통과한 의사소통의 흐름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하버마스도 현실적으로는 관례에 따라 정치체계의 중심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사되는 행정권력은 민주적으로 산출된 의사소통적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행정권력의 영역과 의사소통적 권력의 영역으로 분화된 정치체계는 적어도 이것이 민주적인 원칙에 입각해 있다면 생활세계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체계는 생활세계적 맥락과 결코 유리될 수 없다.

15)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의 분리 및 균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동수,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제5집, 2001, 168-169쪽 참조.

왜냐하면 공동체를 규제하는 규범들은 궁극적으로는 의회와 같은 법치국가에서의 제도화된 의견 및 의지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는 다시 공론장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결사체 그리고 사적 영역의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Habermas 1992, 460). 사회적인 갈등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관심은 높아진 위기의식과 공적 관심의 진작 그리고 그 해결책 모색 등의 과정에 의해 주체화되어지고, 공론장에서의 논쟁을 거친 공론의 압력은 특별한 문제해결 양식을 정치체계에 강제한다. 이 때문에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의사소통은 공동체의 향방에 관해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관점은 시민들의 공론장에서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법제도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의견 및 의지형성의 장인 공론장에 제한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폐단을 보완하는 데 자신의 노력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관점은 민주주의에 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종합·수용하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IV. 토의 민주주의

하버마스는 이제 공론장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는 규범적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kratie*)이다. 토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과정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이론으로서, 하버마스는 “토의정치의 절차가 민주주의의 과정의 핵심을 형성한다”(Habermas 1992, 359)고까지 강조한다. 하버마스는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두 입장인 자유주의적 견해와 공화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자신의 토의 민주주의론을 제시한다.¹⁶⁾

16) 따라서 토의 민주주의는 개방적 의사소통구조의 확보를 통해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적 공정성과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화주의적 의지형성의 요소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흥림, “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 『한국정치연구』, 제7호, 1997, 124-125쪽 참조.

첫째,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들은 양자 모두 국가중심적인 인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계와 이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한 합리적 국가기구인 공적 행정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의 근대 국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국가란 '경제사회의 수호자', 즉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보호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구현하는 '인륜적 공동체의 제도화'된 모습이다. 결국 양자 모두 국가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지만 국가, 특히 국가기구와 사회를 보는 관점에서 이들은 차이를 드러낸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기구와 사회를 분리시킨다. 이러한 관점은 사적 개인들의 자율적인 시장적 거래관계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치국가의 헌법을 통해 경제사회의 기본틀을 공고히 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개별적인 생활과 행복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제적인 공동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비정치적인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관건이다. 개인들의 이익추구가 일차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의지형성 및 정치적 자기실현을 위한 조직화 문제는 부차적인 관심사일 따름이며, 대신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률에 따른 권력행사 등의 규범적 조치를 통해 국가권력을 규율하고, 정치세력들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이익과 가치를 국가가 적절히 조정·촉진하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국가기구와 사회의 분리에 반대한다. 공화주의에 의하면 사회란 시종일관하게 정치사회, 즉 시민사회(*societas civilis*)이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공적인 자율성, 다시 말하면 시민의 자율적인 정치적 의견 및 의지형성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전체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 전체의 정치적 자기 조직화"에 다름 아니다(Habermas 1992, 360). 이처럼 사회의 자기 조직화를 통한 직접적인 지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기구 자체는 불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체제로 구조화된 근대의 국가기구와는 불가피하게 대립·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앞서 말했듯이 총체적인 사회의 과정을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 공통적이다.

둘째, 국가중심적인 이러한 양자의 관점은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에서도 확연히 구별된다. 먼저 로크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모든 규범의 존재이유를 사적인 자율성, 즉 신성불가침한 개인의 자유권 및 재산권과 같은 소극적 자유권

의 보호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서 규범이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단 또는 도구적인 측면에서만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은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익타협'의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민주적인 규칙들은 이러한 이익타협을 위한 규칙들에 다름 아니다. 보통 및 평등선거, 대의제적 의회의 구성, 의사결정의 규칙과 양식 등은 단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들 규칙은 자유주의적 기본권 보장을 여하히 하느냐에 의해 정당화된다. 반면에 루소 이래의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천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는 공동체구성원들의 결합된 의지의 표현인 규범, 즉 국가공동체의 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의견 및 의지형성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전체로 이해하는 담론에 의거한 윤리적·정치적 자기이해(Selbstverständigung)의 형식 속에서 이루어진다(Habermas 1992, 359). 이로써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형성은 전체사회를 스스로 조직화하는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하버마스는 사적인 자율성의 보장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견해와 공적인 자율성의 확보를 우위에 두는 공화주의적 입장을 모두 포용하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절차에 따른 토론과 결정에 기초한 토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적인 관점은 공화주의의 민주적 의견 및 의지형성 과정을 이론의 중심에 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헌법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는다. 그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정치적 의견 및 의지형성이라는 의사소통형식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긴장관계는 공정한 토의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는 결국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은 이 두 입장의 요소들을 모두 수용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토론과 결정의 이상적 절차"(Habermas 1996, 26/1992, 359)라는 개념 속에서 통합한다.

이러한 민주적 토론과 결정의 이상적 절차는 하버마스에 따르면 자유주의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고려 및 이익타협과 공화주의에 토대를 둔 자기이해 및 정의의 담론 사이의 내적 연관성을 형성한다. 이때 특정한 문제와 관계된 적합한 정보의 흐름과 정보의 적절한 가공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성

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산출되리라는 추측을 정당화시켜준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가정에 동의할 경우, 실천이성이 이제 더 이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보편적인 인권이나 공화주의의 핵심인 공동체의 구체적 인륜성 속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소통행위를 가능케 해주고, 나아가 동의나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담론의 규칙과 논증의 형식' 속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규칙과 형식은 "보다 나은 논증의 강압 없는 강압"(Habermas 1972, 161)이라는 논리적이며, 나아가 규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힘에 의거한 합의를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다.¹⁷⁾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의미에서 담론규칙과 논증형식들의 규범적 내용들은 상호이해지향적인 행위의 타당성의 토대인 언어적 의사소통의 구조에 내재한다(Habermas 1992, 359-360). 이러한 담론적 논증을 위한 핵심적인 규칙들만 열거해보면 첫째, 원칙적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담론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개방성과 둘째,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셋째, 담론참여자들은 그 누구도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강제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며 넷째, 토론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동의를 그 목표로 한다 등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탈중심화된 현대의 사회상에 적절한 사회통합의 원리는 토의민주주의, 즉 대화와 토론의 이상적 절차에 의거한 정치적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버마스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는 국가라는 집합적 주체나, 아니면 개인, 역사 또는 프롤레타리아 등과 같은 거대주체를 표방하는 개념에 근거한 이해방식에 의해서는 더 이상 적절히 파악되기 어렵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하버마스는 사회계획이라는 명목하에 행사되는 행정권력도 해방된 민주적인 삶의 양식을 촉진하는 데 적합한 매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해방된 삶의 양식은 민주화 과정의 결과로서 밑에서부터 발전될 수 있는 것이지, 개입을 통해 위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Habermas 1992, 450).

17) 이러한 토의정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영(Young)은, 토론의 과정이 '좀더 나은 논증의 힘에 의거한다'는 토의정치의 논리는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제거한 연후에야 가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토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Iris Marion Young,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Democracy and Difference*, ed. by S. Benhabib, Princeton Univ. Press, 1996. 121쪽 이하 참조.

따라서 그는 이제 토론과 결정의 이상적 절차에 따른 토의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활성화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삶의 양식을 찾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행위할 수 있는 정치적 공론장의 활성화는 근대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기구에 집중된 권력을 다시금 시민들의 수중으로 환수해 민주적인 삶의 양식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Habermas 1996, 26). 이러한 토의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제도화된 심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되는 공론 사이의 협력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의사소통의 전제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토의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담론이론은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공론장들의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적인 이해과정의 수준높은 '상호주관성' (Intersubjektivität)을 강조한다(Habermas 1992, 362). 여기서 그가 말하는 수준높은 상호주관성이란 주체 없는 의사소통의 형식으로서, 개별적이고 고립된 주체의 차원을 넘어선 둘 이상의 주체 사이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호주관성에 입각한 이러한 의사소통행위는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호적인 의미연관의 지평, 즉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상호주관성은 구성원들 서로간에 이해의 상호작용을 갖는 상호주관적 주체, 즉 쉽게 말하자면 공동의 주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주체를 초월한 상호주관성은 정치적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과 의견 및 의지형성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 공동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제도화된 절차 속에서 의사소통적 권력, 좀더 단순화시키면 시민들 공동의 권력 형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준다.

하버마스는 원칙적으로는 대표될 수 없지만, 법치국가의 헌법적 권능의 익명성 속으로 사라진 국민주권을 이제 주체 없는 의사소통의 형식인 상호주관성의 차원에서 재해석해낸다. 그에 의하면 익명화된 국민주권은 이제 공론장을 통해 의사소통적 권력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변모한 국민주권은 "시민사회의 결사체라는 토대 위에서 문화적으로 동원되는 공론장들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제도화된 의지형성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등장한다." (Habermas 1992, 365)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예술, 종교 그리고 문학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공론장에서의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영향력은, 다시금 제도화된 영역인 의회와 그 심의기구들의 내부와 외부의 토론장 속에서 전사회

적인 규제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관해 합리적인 의견 및 의지형성이 일어난다. 따라서 수준높은 상호주관성에 입각한 공론의 형성 및 제도화된 선거, 입법부의 결정을 관통하는 의사소통의 흐름은 이제 공론장에서 형성된 영향력과 의사소통적으로 산출된 권력이 입법을 통해 행정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주관성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 공화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대’ (Solidarität) 개념이다. 하버마스는 여기서 근대 이후의 사회통합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영역에서의 화폐와 행정체계에서의 권력에 이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세 번째 자원으로서 연대라는 개념을 추가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근대사회를 지탱해온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행정 체계에서의 화폐와 권력에 의한 사회통합력은 후기 산업사회인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미 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연대는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내재하는 사회통합적 잠재력의 발현으로서 “의사소통을 통해 달성된 합의와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수평적인 정치적 의지형성” (Habermas 1996, 21)에 의해 나타난다.

하버마스는 연대에 입각한 공적 의지의 영향력을 다시금 제도적 절차의 과정 속으로 도입한다. 그에 의하면 “연대에 의한 사회통합적인 힘”은 이제 폭 넓게 분화된, 다양한 자율적 공론장들에서의 의사소통을 거쳐 제도화된 민주적 의견 및 의지형성의 절차를 매개로 발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의견 및 의지형성이 궁극적으로는 법을 매개로 “사회통합의 다른 두 가지 매체”인 화폐와 권력에 “대항해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 (Habermas 1992, 363)고 강조한다. 즉 하버마스는 체계에 대항하는 생활세계의 민주적인 잠재력을 연대라는 시민 공동의 사회통합적인 힘과 그 제도화를 통해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의정치의 핵심은 다시금 의견 및 의지형성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합리화된 생활세계와 내적 연관을 맺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시민들은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민주적인 역량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V. 나가며

공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하버마스는 후기 산업사

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론장의 의미를 부활시킴으로서, 침체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강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초기에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의 정치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진단했으나, 후기로 오면서 점차 공론장의 민주적이고 해방적인 의미를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 그는 특히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체계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영역인 생활세계라는 이분화된 개념에 의해 근대 국가의 민주적인 삶의 양식을 분석해내고 있다. 여기서 그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축소 내지 위축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활세계에 내재한 해방적 잠재력에 의해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유지하려는 저항력이 대두되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생활세계로부터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각종 결사체들에 의해 구성되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추출해낸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민사회가 바로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적인 삶의 양식을 지켜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하버마스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결집된 민주적 잠재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발전되는 것을 공론장 개념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제 체계와 생활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공론장이 정치체계에 의한 정당성 창출의 수동적인 차원의 공론장의 측면만이 아닌, 생활세계의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공적 의지형성의 공간으로서의 자율적 공론장의 측면을 강조한다. 원칙적으로 열려있는, 즉 공개성에 입각한 자율적 공론장은 체계로부터 생활세계에 미친 반항을 감지하고 이를 종합해 공적 의견으로 집약해낸다. 이를 통해 공론장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형성된다. 그러나 공론장에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구속력있는 권력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제도적 절차에 따른 의사소통적 권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적 권력은 시민사회의 결사체라는 토대 위에서 문화적으로 동원되는 공론장들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제도화된 의지형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문화적인 결사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은 공론장에서 걸러지고 집약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공적 의견으로 가공된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다시금 개별 유권자들의 선거행태나, 의회에서의 결정 등에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환된다. 이때 의사소통적 권력은 시민들

의 공적 의견이 제도적 절차를 거쳐 정치 권력화된 것으로서 시민 공동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론장 논의에서 강조되었던 의사소통행위는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토의 민주주의는 의견 및 의지형성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을 위해서는 토론과 결정의 이상적 절차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의 핵심은 보다 나은 논증에 의한 합의의 가능성에 있다. 하버마스는 합리적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주관성의 측면과 이에 바탕을 둔 연대 개념에서 화폐와 권력에 대항하는 생활세계에 내재한 사회통합적인 잠재력을 발견해낸다. 즉 그는 생활세계의 시민들이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민주적인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민주주의와 공론장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먼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법치국가적 틀 속에서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폐단을 보완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대 그리스적인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시민들에 의한 직접적인 지배의 형식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공론장에서의 공적 의견 및 의지형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의사소통적 권력을 산출해내는 데 있다. 이때 의사소통적 권력은 정치체계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의사소통적 권력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의 형식을 빌어 행정권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 집행은 행정체계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공론장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체계에 영향력만을 미칠 뿐이다.

이처럼 시민들은 공론장을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결정 자체는 법제도적인 절차, 다시 말하면 대의제적 제도들에 위임함으로써 시민들이 매사에 있어서 공공의 문제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부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정치체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결과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자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공론장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치체계의 행위자들은 시민들의 공적 의견형성과 그 영향력을 존중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버마스는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근

간을 흔들지는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보다 나은 논증의 힘에 의거해 이성적인 합의를 규범적으로 강제한다는, '토론과 결정의 이상적 절차' 라는 형식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영(I. M. Young)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러한 형식이 관철되려면 적어도 모든 참여하는 시민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문화적·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사라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아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인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권력의 엘리트에의 편중현상을 해소해주며,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환기시켜 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론장의 핵심적 역할은 대의제에 기초한 정치체계가 간과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수용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를 통제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민주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정치과정의 시청자였던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김재현, 1996: “하버마스에서 공론영역의 양면성”.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이진우 엮음. 문예출판사.
- 유홍립, 1997: “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 『한국정치연구』. 제7호.
- 이동수, 2001: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제5집. 한국정치사상학회.
- 장은주, 2000: “시민사회의 비판적 잠재력” 『철학』. 제64호. 한국철학회.
- 장춘익, 1997: “법과 실천적 합리성: 하버마스의 법 대화 이론” 『철학』. 제51호. 한국철학회.
- 정호근, 1995: “근대성의 변증법과 비판적 이성의 기능 및 가능성”. 『철학』. 제43호. 한국철학회.

Arendt, Hannah, 1958: *Vita Activa*. München.

Barber, Benjamin,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leicken, J. 1986. *Die athenische Demokratie*, Paderborn, München and Wien.

Benhabib, Seyla. 1991: “Modelle des öffentlichen Raumes: Hannah Arendt, die liberale Tradition und Jürgen Habermas”. *Soziale Welt* 42. 147-171.

Calhoun, Craig (ed.), 1992: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The MIT Press.

Canovan, Margaret, 1981: *Populism*.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Javanovich.

Cohen, J. and Arato, A.,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IT Press.

Habermas, Jürgen, 1972: “Wahrheitstheorien”, in: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 1986.

_____, 1981a: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1. Frankfurt/M.

_____, 1981b: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2. Frankfurt/M.

_____, 1985: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Frankfurt/M.

_____, 1988: *Nachmetaphysisches Denken. Philosophische Aufsätze*. Frankfurt/M.

_____,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Frankfurt/M.

_____,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

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M.

_____, 1996: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Democracy and Difference*, ed. by S. Benhabib, Princeton Univ. Press, 1996.

Meier, C. 1970. *Entstehung des Begriffs 'Demokratie'. Vier Prolegomena zu einer kritischen Theorie*, Frankfurt/M.

Toffler, Alvin and Heidi, 1994: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 Atlanta: Turner Pub. Inc.

Young, Iris M.,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Democracy and Difference*, ed. by S. Benhabib, Princeton Univ. Press, 1996.

ABSTRACT ■

Habermas' Conceptions of Public Sphere and Deliberative Democracy

Myounghag Cha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what the Jürgen Habermas' conceptions of "public sphere" and "deliberative democracy" mean, and what kind of effects they have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democratic theories. After analyzing bourgeois "public sphere", a source for social forces to destroy the ancien regime, Habermas emphasizes the political role in developing democracy, criticizing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modern citizens, just focusing on the private life, are not interested in politics owing to the elite's manipulation. As a strategy to overcome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disappearance of "civic public sphere" in modern political society, Habermas suggests generating the democratic potentials by communicative rationality in the life-world (Lebenswelt). The paper claims: Habermas' conceptions, such as "deliberative democracy," "civil society," and "autonomous public sphere", which rejuvenate citizens' voluntary political participation (plentiful resources for democratic self-rule), are an important conception as an alternative to parliamentar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Keywords: public sphere, deliberative democracy, communicative rationality, life-world, civil society, political participation